

아베노믹스의 주요 정책과제

* 이 자료는 미즈호종합연구소가 발표한 『긴급리포트』, 「아베노믹스 5년과 금후 정책과제」(2017년 12월 21일)의 일부를 요약번역, 정리하고 시사점을 덧붙인 것임

- 아베노믹스가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앞으로 풀어야 할 주요 정책과제로는 ①인재육성 혁명, ②생산성혁명, ③노동방식 개혁, ④소비세 증세수입의 용처 변경, ⑤재정건전화 계획의 재검토, ⑥사회보장 개혁, ⑦금융의 출구전략 등임
- 이들 7대 과제는 궁극적으로 성장력 향상과 경제의 선순환 형성을 위한 구조개혁으로서 특히 ①, ②, ③은 상호 보완적인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에 해당됨
- 그리고 ④, ⑥은 ⑤재정건전화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, ⑦의 금융의 출구전략은 수요측면의 정책으로서 경제의 선순환과 크게 관련이 있음

- 2012년 12월 26일 출범한 아베정부는 2017년 12월 26일로 만 5년이 경과
- 2015년 가을 이후 아베노믹스 제 단계에서는 「1억총활약사회」 구상하에서, 종래의 아베노믹스의 혜택이 충분치 않은 국민 각층(육아세대, 저소득층, 지방 등)을 위한 정책에 역점
- 그러나 아직도 본격적인 경제재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, 구조개혁에 의한 성장력 향상과 경제의 선순환 형성이 과제가 되고 있음
- 이하에서는 아베노믹스가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앞으로 풀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살펴봄

1. 인재육성혁명

□ 인재육성책의 청사진을 「인생100년시대구상회의*」에서 논의

* 총리, 인재육성혁명 담당상(의장 대리), 문부과학상, 후생노동상, 1억총활약 담당상 등의 관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장 등 6명의 민간유식자들로 구성

- 고령화·인구감소·글로벌경쟁의 격화, 산업구조의 변화, 기술의 진화, 격차문제의 확대 등 경제환경 변화속에서 인재의 육성과 활용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

- 이러한 가운데 아베 정권은 새로운 중점 정책 테마로 인재육성 혁명을 내걸고 주무 부서도 설치
 - 2017년 9월 설치된 「인생100년시대구상회의」는 인재육성혁명의 기본구상을 2018년 상반기에 완성할 예정
 - 동 회의의 주요 검토과제는 교육부담 경감, 리커런트교육, 고등교육 개혁, 채용의 다원화, 전세대형 사회보장 등

□ 새로운 정책패키지와 교육·인재력 발휘의 선순환

- 일본정부는 2017년 12월 18일 인재육성 혁명과 생산성 혁명을 양륜으로 한 새로운 경제정책패키지를 각의 결정
 - 이중 일부 시책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 등에 의해 선행적으로 구체화될 방향
 - 본격적인 대응은 2019년 소비세 증세 이후 실시
- 인재육성 혁명에서는 유아교육의 무상화, 대기아동의 해소, 고등교육의 무상화, 간병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
 - 부담경감책은 재원확보가 과제이며 소득제한을 설정하지 않으면 격차가 확대될 우려도 있음
 - 교육부담 경감과 동시에 인재력의 향상·발휘를 위한 교육의 내용이나 질도 중요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인 추진이 중요

2. 생산성 혁명

□ 인구감소하에서 생산성향상을 위한 대응 강화

- 노동력인구의 감소경향이 예측되고 있는 일본에서 성장력의 유지·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임
 - 일본의 노동생산성이나 전요소생산성의 상승률은 1990년대에 크게 저하, 그 후에도 정체상황이 계속되고 있음
 - 잠재성장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정책의 강화와 기업대응이 중요

- 제4차 아베내각은 인재육성혁명과 함께 생산성혁명을 저출산·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륜으로 설정
 - 로봇, IoT, AI 등과 같은 분야의 이노베이션 등에 의해 생산성향상을 목표로 함 (2020년까지 3년간을 집중투자기간으로 설정)

3. 노동방식 개혁

□ 노동방식 개혁관련법안의 조기 성립·시행

- 2018년 정기국회에서 심의가 예상되는 노동방식개혁법안의 조기 성립·시행이 필요
 - 장시간노동의 시정이나 비정규고용에 대한 처우개선 등 진전을 기대
- 추가적인 과제로는 업무효율화에 의한 노동시간 단축이나 유연한 근무형태의 보급 등을 통한 시간당 생산성 향상

<표 1> 노동방식개혁 관련법안의 개요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. 노동방식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추진 | |
| 2. 장시간노동의 시정, 다양하고 유연한 노동방식 실현 | |
| (1) | <p><노동시간에 관한 제도의 재검토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간외노동의 상한을 월 45시간, 연 36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연 720시간, 단월 100시간 미만(휴일노동 포함), 복수월평균 80시간을 한도로 설정 • 월 6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노동의 할증임금율(50%이상)을 중소기업에도 적용 • 10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5일에 관하여 매년 기간을 지정하여 부여 • 기획업무형 재량노동제의 대상업무 확대(과제해결형 개발제안 업무, 재량적으로 PDCA를 실시하는 업무) • 고도의 프로페셔널제도 창설 |
| (2) | 근무간 인터벌 제도의 보급, 촉진 |
| (3) | 산업의 산업보건기능의 강화 |
| 3. 고용형태에 구애되지 않는 공정한 대우를 확보 | |

4. 소비세 증세와 용처 변경

□ 1.7조 엔을 육아세대를 위한 투자로 전환

- 아베 정부는 2019년 10월 소비세율을 10%로 인상하고 증수분(5.6조엔)의 용처를 변경
 - 재정적자 삭감용으로 예정되었던 4조 엔중 1.7조 엔을 교육무상화 등의 육아세대를 위한 투자로 전환
 - 2017년 12월 8일 결정된 「경제정책패키지」에서는 이 1.7조 엔과 기업부담분 0.3조 엔을 합친 2조 엔을 육아세대를 위한 투자를 포함한 인재육성혁명에 충당할 방침
- 향후 중요과제는 유아교육무상화의 상세한 제도설계(유식자회의에서의 검토를 거쳐 2018년까지 책정)

5. 재정건전화계획의 재검토

□ 2019년 6월까지 재검토

- 소비세 수입의 용처변경에 따라 2020년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던 기초적 재정수지(PB) 흑자화를 보류
 - 다만, 2020년 PB 흑자화는 원래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
- 2018년 6월에 책정되었던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 방침 속에 새로운 재정건전화계획이 포함될 전망
 - 아베 총리는 PB 흑자화를 가급적 빠른 시기에 달성하고 싶다고 표명(2020년~2025년도 경을 달성연도로 정할 공산이 큼)
 - 보다 현실적인 경제성장의 상정, 수지개선 속도의 설정 등이 요구됨

<표 2> 경제·재정재생계획의 재검토시 중요한 관점

- | |
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제성장의 예상을 현실적으로(실질 1%대 후반, 명목 2%대 후반 등) • PB 흑자화는 늦어도 2025년도 경에는 달성 • PB 적자에 대한 GDP 비율의 축소속도를 설정(매년도 0.5%Pt씩 축소 등) • 사회보장경비의 증가는 현행 5,000억 엔보다도 압축 • 사회보장 이외의 일반세출은 최저한 보합정도로 억제 • 세출확대압력의 받침점시역할을 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통제 • 경제·재정일체개혁에 의한 세출효율화를 심화·가속 • 활용이 불충분한 자금(지방기금, 관민펀드 등)을 검증 • 소득과세 등을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구조로 |
|---|

6. 사회보장개혁

□ 부담구조의 재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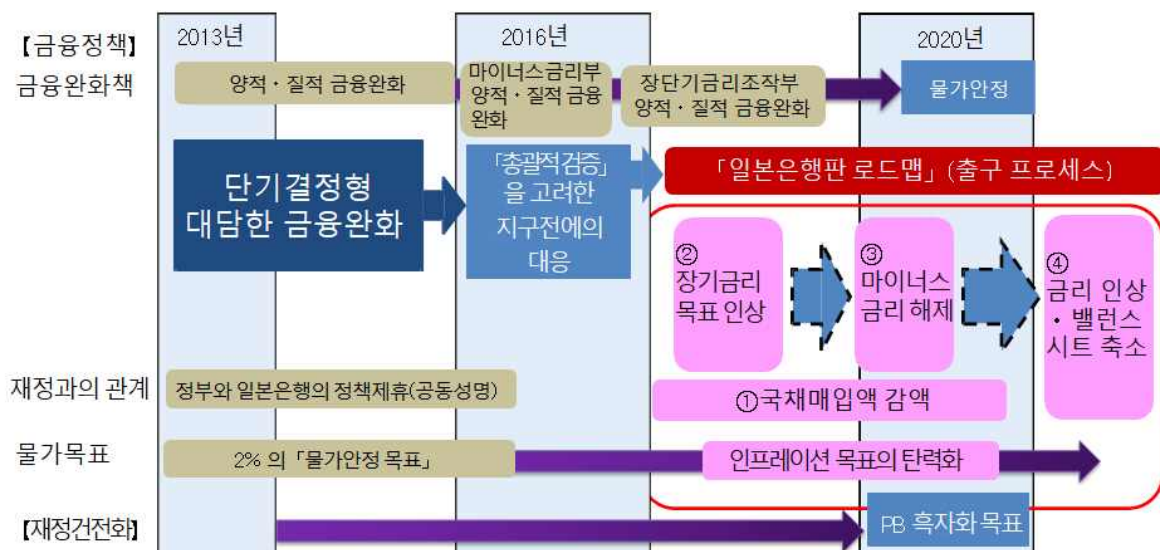
- 저출산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사회보장급부비는 2017년도(예산기준)120.4조엔에서 2025년도에는 148.8조엔으로 증가할 전망
 - 특히 앞으로는 7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의료·간병 급부비가 급증
-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부담능력에 대응한 부담을 요구하고, 노동방식개혁의 추진 등에 의해 노동참가율을 높여 보험료부담자를 늘리는 등의 대응이 과제

7. 금융의 출구전략

□ 물가목표달성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, 본격적인 출구는 전망불가

- 일본은행은 2013년 4월 양적·질적 금융완화정책을 도입한 후, 6회에 걸쳐 물가목표 2%의 달성시기를 보류
- 2017년 10월 전망에서는 2019년도 경 물가목표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패 리스크도 클 것이라는 전망
- 물가목표달성이 보이지 않은 가운데, 본격적인 출구이행은 어려움

<그림> 아베노믹스의 금융재정정책 로드맵




□ 일본은행은 저금리정책장기화에 의한 부작용을 주시

- 일본은행은 저금리장기화에 의한 금융중개기능에의 영향, ETF자산매입 정책효과와 부작용을 주시
 - 구로다 총재는 스위스에서의 강연에서 금리저하에 의해 금융중개기능이 저해되는 러버샐레이트(금리를 지나치게 인하하면 예대금 금리차이의 축소를 통하여 은행부문의 자기 자본제약이 타이트해져 금융중개기능이 저해되어 금융완화의 효과가 반전될 가능성)를 언급
 - 이것이 정책의 부작용을 고려한 정책수정에 대한 포석이라는 의견도 있음

□ 국채매입을 감액하면서 금리목표인상시기를 모색

- 일본은행은 일드커브(yield curve)도입후, 국채매입액을 감액
 - 춘투에서의 임금인상 움직임이 확인되고, 구미금융정책이 출구로 향하는 가운데 엔고 리스크가 저하되었다고 판단하면 다음 단계는 장기금리목표의 인상이라고 예상

□ 시사점

- 이상 살펴본 아베노믹스의 7대 과제는 일본의 성장력 향상과 일본경제의 선순환 형성을 위한 구조개혁으로 귀결됨
- 이들 과제 중 ①인재육성 혁명과 ②생산성혁명, ③노동방식개혁은 성장력 향상을 위한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으로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
- 이와 비교하여 ④소비세 증세수입의 용처 변경, ⑤ 재정건전화 계획의 재검토, ⑥사회보장 개혁, ⑦금융의 출구전략 등은 성장을 위한 주로 수요측면의 정책으로서 상호 상충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음
 - 사회보장 지출이 많을수록 재정건전화가 어려워지는 한편, 사회보장지출을 위해 소비세를 늘리면 그 자체는 재정건전화에 도움이 되나, 소비가 감소되어 성장력이 떨어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세출수입이 감소, 재정악화로 이어짐
 - 한편, 금융의 출구전략은 대표적인 수요정책으로 금리와 환율 조정을 통해 투자수요와 수출수요, 물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의 선순환에 직결됨. 

<참고자료>

<https://www.mizuho-ri.co.jp/publication/research/pdf/urgency/report171221.pdf>